

대북정책 강의 참고자료

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

2002. 10.

통 일 부

목 차

1.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개요

2.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

① 남북정상회담과 6.15 남북공동선언	2
② 남북장관급회담	4
③ 남북 군사분야 회담	6
④ 남북 경제분야 회담	8
⑤ 남북적십자회담	11
⑥ 남북 체육분야 회담	12

3.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

①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착공	13
② 개성공단 건설	17
③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	19
④ 4개 경제협력 합의서	22
⑤ 금강산관광 활성화	24
⑥ 경수로 건설	25

4. 평화와 화해 분위기 정착

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와 군사 Hot-Line 설치	27
② 평양 현지 생방송 실시 등 교류 활성화	29
③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	34
④ 이산가족 상봉, 면회소 설치	36
⑤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	39
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	41

5. 북한의 변화 가속화

①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	44
②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	46
③ 북·일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	50

6. 향후 추진 방향

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·효율적 추진	52
②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	53
③ 평화증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조 강화	54

- 부록 1. 남북관계 주요일정(2002년 9월 이후)
2. 남북관계 주요일지(2000.1 ~ 2002.9)

1.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개요

- 남북 분단 이후 역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,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.
- 「국민의 정부」 또한 출범 이후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증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 왔음.
 -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임.
- * 대북정책 3원칙 : ①무력도발 불용 ②흡수통일 배제
 ③남북화해협력 적극 추진
- 즉 당장 법적·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
 -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
 -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'사실상의 통일상황'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임.
-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은 ▲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 직면해 있는 북한의 상황 ▲1970년대 후반부터 벌어진 남북간 국력 격차 ▲우리 사회의 성숙성에 따른 자신감 등에 바탕한 것임.
-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결과, 남북간에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었고,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으며,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.

2. 남북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

① 남북정상회담과 6.15 남북공동선언

-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만나고 대화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임.
- 남북 정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를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였음.
- 아울러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, 경제·사회·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.
- 두 정상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 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,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「6.15 남북공동선언」을 발표하였음.

< 6·15 남북공동선언 요지 >

- ▷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.
 - ▷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.
 - ▷ 흩어진 가족,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,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.
 - ▷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, 사회, 문화, 체육, 보건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.
 - ▷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.
-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.

○ 이러한 『6.15 남북공동선언』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.

- 첫째,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에 직접 합의·서명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짐.
- 둘째,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확인하였음.
- 셋째, 통일을 미래의 과제로 두고 우선 평화공존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였음.
- 넷째,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과제인 이산가족문제나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실천사항이 담겨 있음.

○ 특히 북한이 일관성 있게 『6.15 남북공동선언』이행의지를 표명하고 있어, 『6.15 남북공동선언』은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음.

남북정상회담 추진경과

- 김대중대통령,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(1998.2.28)
- 정부차원의 교류협력 추진 필요성 역설, 당국간 대화 촉구(2000.3.9, 베를린 선언)
- 남북정상회담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특사접촉(2000.3.17~4.8, 상해 및 북경)
 -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(2000.4.8, 북경)
-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(2000.4.22~5.18)
 -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(2000.5.18)
-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파견(2000.5.31)

② 남북장관급회담

-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당국간 회담으로서, 그 동안 7차례 회담을 통해 『6.15 남북공동선언』을 이행하고 남북 화해·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는 중심협의체로서
 - 남북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회담 개최와 이러한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·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특히, 금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「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」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,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, 제2차 금강산관광당국회담 개최의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고
 -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 등 남북간 핵심 현안의 실천에 관한 10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
 - 지난 6.29 서해교전을 전후한 남북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협력관계를 복원하는 성과를 이루었음.

<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 >

- ▷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(8.26~29)
 -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공사 남북 동시 병행 착공
 - 철도·도로 연결, 개성공단 건설,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 협의
- ▷ 철도·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함
 -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
- ▷ 임남댐(금강산댐) 공동조사 실시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(9월 중순)
- ▷ 2002년 추석을 계기로 제5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적십자 책임자금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(9.4~6)
- ▷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(9.10~12)
- ▷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협력
- ▷ 남북축구경기(9.6~8, 서울) 적극 협력
- ▷ 태권도 시범단 교환(남측 시범단 9월 중순, 북측 시범단 10월 하순)
- ▷ 북측 경제시찰단 남측 방문(10월 하순)
- ▷ 제8차 장관급회담 평양에서 개최(10.19~22)

○ 한편, 2000년 7월이래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횟수	기 간	개최장소	공동보도문	주요 합의 내용
제1차	2000. 7.29 ~ 7.31	서울	6개 합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○ 8.15에 즈음, 남과 북, 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·환영하고 실천 길의 행사 개최 ○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
제2차	2000. 8.29 ~ 9. 1	평양	7개 합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○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○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 추진
제3차	2000. 9.27 ~ 9.30	제주도	6개 합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·설치 ○ 이산가족 생사확인, 서신교환,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○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
제4차	2000.12.12 ~ 12.16	평양	8개 합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 ○ 제3차 이산가족 교환(2001년 2월말, 100명) ○ 이종과세,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를 각기 발효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통보
제5차	2001. 9.15 ~ 9.18	서울	13개 합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국간 대화, 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,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○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○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
제6차	2001.11. 9 ~ 11.14	금강산	공동보도문 채택 없음	-

③ 남북 군사분야 회담

- 군사분야의 남북대화는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.
- 2000년 9월 25일,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남과 북은 『6.15 남북공동선언』 이행에 따른 군사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
 -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음.

<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주요 합의사항 >

- ▷ 6.15 남북공동선언 이행, 민간인 왕래·교류 보장 관련 군사적 문제 상호 적극 협력
- ▷ 긴장완화, 공고한 평화 구축, 전쟁위협 제거 공동 노력
- ▷ 철도·도로 연결을 위한 인원·기재의 DMZ 출입 허가
- ▷ 철도·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남북관할지역으로 설정

-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철도·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000.11.28~2001.2.8간에 5차례 개최하여
 - '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,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'를 타결하였으나, 북한측의 문본 교환 거부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었음.
- 금년 9월 14일~17일, 2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'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,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'를 타결·발효시켰음.
- * 9.17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합의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

< 철도·도로 연결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서 요지 >

- ▷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을 위해 비무장지대(DMZ)에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폭 250m(경의선), 100m(동해선)의 '남북관리구역'을 설정
- ▷ 2002년 9월 19일부터 남과 북의 관리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동시에 착수
- ▷ 지뢰제거 작업은 09시부터 17시까지 하며, 필요시 연장
- ▷ 공사 작업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위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(자석식 전화 1회선, 팩스 1회선)을 연결
- ▷ 쌍방 우발적 충돌 발생시 전화통지문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사태를 해결

○ 철도·도로 관련 군사적 실무보장 합의서의 타결은 경의선·동해선 연결공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

- 남북화해협력사업에 대한 쌍방 군사당국자의 지원 선례를 마련하고,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는 의미가 있음.

남북 군사분야 회담 주요 일지

-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(2000.9.25, 제주도)
-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2000.11.28, 통일각)
-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2000.12.5, 평화의 집)
-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2000.12.21, 통일각)
-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2001.1.31, 평화의 집)
-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2001.2.8, 통일각)
 - "남북관리구역의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" 타결
-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2002.9.14, 평화의 집)
 - "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,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" 타결
-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(2002.9.16, 통일각)
-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2002.9.17, 평화의 집)
 - 쌍방 국방장관이 서명한 "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,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" 교환·발효

4) 남북 경제분야 회담

- 「6.15 남북공동선언」 제4항에서 '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' 합의한 이래
 - 2000년 9월 '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'을 시작으로 금년 9월말 현재까지 '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', 철도·도로 연결 실무협의회' 등 총 10차례의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하였음.

<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>

- 금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」를 서울에서 개최하여
 - 철도·도로 연결, 개성공단 건설, 임진강 수방사업 등에 대한 분야별 회담일정을 확정하는 등 8개항에 합의하였음.

<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주요 합의사항>

- ▷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공사
 - 9.18 쌍방 동시 착공 및 완공 목표시기 확정
 - 군사적 보장조치를 9.18 전까지 해결하도록 군사실무회담 개최
 - 철도·도로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(9.13~15, 금강산)
- ▷ 개성공단 건설 금년내 착공
 -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(10월중, 개성)
- ▷ 임진강 수해방지문제 해결을 위해 11월중 현지조사 착수
 -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(10월중, 개성)
- ▷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(9.16~18, 금강산)
- ▷ 투자보장, 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험합의서의 빠른 시일내 발효
- ▷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(차관), 비료 10만톤 제공
- ▷ 북측 경제시찰단 남측방문(10.26~)
- ▷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(11.6~9, 평양) 등

- * 한편,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지난 2000년 12월에 평양에서 개최되어, 경추위 구성·운영 문제, 전력협력 문제, 철도·도로연결 문제,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음.

<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>

- 금년 9월10일~12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「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」은 '금강산 관광 대가 지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 문제'에 대한 남북간 입장 차이로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
 - 동해선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대로 금강산 육로 관광 실시, 관광특구 지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음.
- 남과 북은 향후 제3차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.
 - * 한편,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당국회담은 지난 2001년 10월에 금강산에서 개최된 바 있음.
 - * 금강산관광 활성화 관련 내용은 p.24 참조

<남북 철도·도로 연결 실무협의회>

- 금년 9월13일~17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「남북 철도·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」에서는
 - '철도·도로공사 착공식, 연결구간 및 시설구조 등 실무적 사항들에 대한 합의서'와 '자재·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'를 채택하였음.
- 이 합의에 따라, 동해선 도로는 우선 12월초부터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 금강산 육로관광 및 이산가족 왕래의 통로로 활용될 것임.
- 자재·장비 지원(지원 규모 : 약 459억원)과 관련, 우리측 인원은 북측의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, 자재·장비의 조작방법 등 기술지원 및 장비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침임.

< 남북 철도·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주요 합의사항 >

- ▷ 도로는 경의선은 개성공단을 감안 4차선으로, 동해선은 2차선으로 연결
- ▷ 출입심사, 검역, 통관 절차를 위한 철도 분계역은 비무장지대 밖의 편리한 위치에 각기 건설
- ▷ 남측과 북측 분계역까지는 우리측 방식인 디젤 기관차 견인방식으로 연결
- ▷ 철도·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·장비는 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1차분은 9월 안에, 나머지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원산항과 해주항 등을 통해 북측에 제공
- ▷ 자재·장비는 차관방식으로 제공, 자재와 일부 장비는 공여로, 일부 장비는 임대로 제공(차관제공 조건 : 10년 거치 20년 상환, 이자1%)
- ▷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철도·도로연결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

* 철도·도로연결 관련 내용은 p.13~p.16 참조

<임남담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>

- 금년 9월16일~18일 금강산에서 열린 「임남담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」에서 남과 북은 공동조사의 필요성과 공동조사의 원칙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
 - '조사방법 및 공동조사 사전조치'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서를 타결하지 못하고 차기 접촉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였음.
 -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이 공동조사 방법론을 제시하고 공동조사 이후 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, 향후 진전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임.

<개성공단,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접촉>

- 「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」와 「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」는 10월중에 개성에서 개최될 예정임.

* 개성공단 및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내용은 p.17~p.20 참조

5] 남북적십자회담

- 「6.15 남북공동선언」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그 동안 4차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
 - 이산가족방문단 교환(5회), 생사·주소 확인(2회), 서신 교환(1회) 등을 합의·추진하였음.
 - 금년 9월 6일~8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「제4차 남북적십자회담」에서는
 - 우선 금강산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, 면회소 완공 후 면회의 정례화, 생사·주소확인 및 서신 교환 계속 확대, 6.25전쟁시 행방 불명된 자들에 대한 생사·주소확인 등에 합의하였음.
 - 이로써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·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하고, 그 동안 북측이 논의를 피해왔던 국군포로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·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.
- *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1년 적십자회담 개최이래 최초의 총재회담

< 남북적십자회담 주요 합의사항 >

- ▷ 이산가족면회소를 우선 금강산지역에 설치, 경의선 철도·도로가 연결 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 협의·확정
 - 금강산지역 면회소는 남북이 공동건설, 착공일자는 지질조사, 설계 등 선행공정에 따라 추후 결정
 - 금강산지역 면회소 완공 후 면회 정례화
- ▷ 생사·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·추진, 규모·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협의
- ▷ 6.25 전쟁당시 행방불명자 생사·주소확인 문제 협의·해결
- ▷ 면회소 설치·운영 등 합의사항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
- ▷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, 9월13일부터 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

⑥ 남북 체육분야 회담

- 정부는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가 남북간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민족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차원에서
 - 북한측에 대회 조직위원회 명의의 초청 서한을 발송(2001.10)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음.
- 2002년 8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9월 29일부터 '10월 14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'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.
- 이에 따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북한 올림픽위원회 실무자간 회담이 2차례(8.17~19, 8.26~28) 금강산에서 개최되어
 - 북측 선수단·응원단 규모, 개·폐회식때 남북동시입장, 백두산 성화 채화 등에 합의하였음.

< 실무회담 주요 합의사항 >

- ▷ 북측 선수·올림픽위원회 위원·심판원 305명 파견
 - 9.23, 9.27 2회에 걸쳐 북측 항공기를 이용, 남측 방문
- ▷ 개·폐회식 행사에 공동 입장, 시드니 올림픽 전례 적용
 - 남북 단일 복장, 한반도기 사용, "코리아" "KOREA"로 명기
- ▷ 경기 출전, 시상식 때 각각 국기 게양 및 국가 연주
 -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헌장과 국제관례 준수
- ▷ 북측은 취주악대·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355명의 응원단 파견
 - 9.28 「만경봉호」 선박 이용, 부산항에 도착, 선박에서 숙식
- ▷ 9.5 백두산 성화 채화, 9.6 금강산에서 조직위측에 인계

3.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

㉠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착공

- 2002년 9월 18일 오전 11시, 분단 50여년 만에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·도로와 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 '착공식'을 남과 북이 동시에 거행하였음.
- * 1982년 우리 정부가 20개 시범실천사업의 하나로 '서울-평양간 도로 연결'을 제의한 때로부터 약 20년만에, 2000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'남북간 철도-도로 연결'을 합의한 때로부터 약 2년만에 실현
- 남과 북은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착공식을 공개적으로 성대히 치름으로써 향후 성실한 공사 추진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하였음.

< 철도·도로 착공식 개요 >

착공식 지점

▷ 남측

- 경의선 :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비무장지대 제2통문 앞
- 동해선 :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 전방 500m

▷ 북측

- 경의선 : 개성 남쪽 봉동역
- 동해선 : 금강산 온정리 금강산역

착공식 참가자

▷ 남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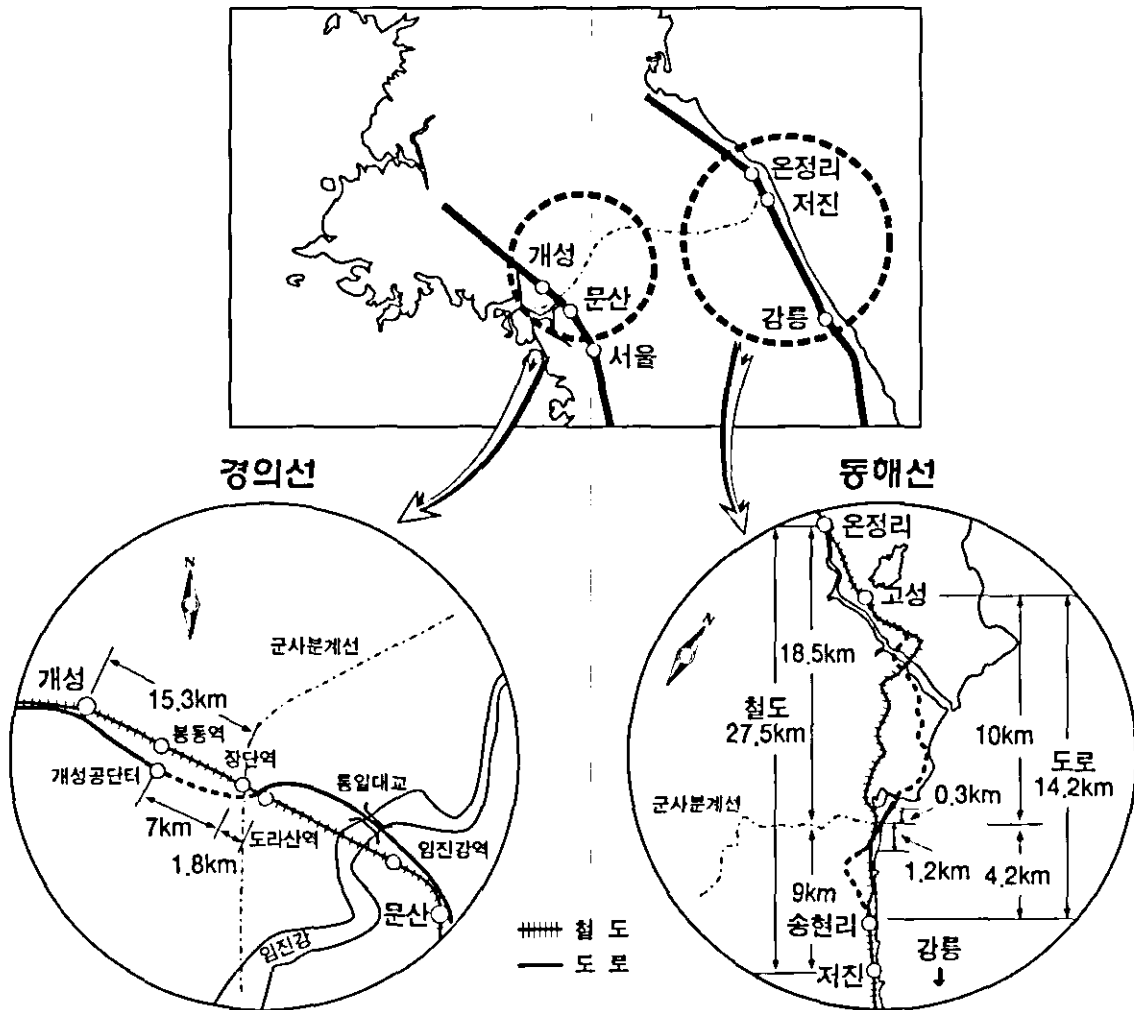
- 경의선 : 김석수 총리, 최성홍 외교부통상 장관, 손학래 철도청장, 주한 외교사절단, 실향민 등 1,000여명
- 동해선 : 정세현 통일부 장관,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, 실향민, 지역주민 등 1,000여명

▷ 북측

- 경의선 : 조창덕 내각 부총리, 장일선 국토환경보호상,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2,500여명
- 동해선 : 홍성남 내각 총리, 김용삼 철도상, 김령성 내각 참사, 아드레이 카를로프 주북 러시아 대사 등 3,000여명

* 북측은 금강산에서 KBS 기자에게 동해선 착공식 취재를 허용

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구간



※ 경의선 공사 구간

- ▶ 철도 : 17.1km(도라산역 - 장단역 : 1.8km, 장단역 - 개성 : 15.3km)
- ▶ 도로 : 8.8km(도라산역 - 군사분계선 : 1.8km, 군사분계선 - 개성공단터 남단 : 7km)

※ 동해선 공사 구간

- ▶ 철도 : 27.5km(저진 - 군사분계선 : 9km, 군사분계선 - 온정리 : 18.5km)
- * 저진 - 강릉 구간 118km(7년 내외 소요)
- ▶ 도로 : 14.2km(송현리 - 군사분계선 : 4.2km, 군사분계선 - 고성 : 10km)

※ 동해선 임시도로 : 1.5km(군사분계선 이남 : 1.2km, 군사분계선 이북 : 0.3km)

〈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 규모와 구간〉

노선	종류	규모	구 간	거리 (Km)	연결시기
경의선	철도	단선	개성역(북)-도라산역(남)	17.1	2002년 12월
	도로	4차선	개성공단터(북)-도라산역(남)	8.8	2003년 봄
동해선	철도	단선	온정리(북)-저진(남)	27.5	2003년 9월
	도로	2차선	고성(북)-송현리(남)	14.2	2003년 9월
	임시도로	1차선	고성 군사분계선	1.5	2002년 11월

* 9.18 동시에 착공된 철도·도로는 금년 12월초부터 금강산 임시도로
→ 경의선 철도→ 경의선 도로→ 동해선 도로·철도 순서로 개통
될 예정임.

-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·도로의 착공은 남북사이에 50년 동안
가로막혀 있던 군사분계선을 열고 비무장지대(DMZ)를 개방함
으로써 명실상부하게 '분단의 장벽을 여는 역사적 사건'이며
 - 남북간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관통하는
대역사(大役事)로서 남북간 긴장을 화해로 전환하는 상징적
사건임.
-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은 군사보장합의서 발효와 직접 연계됨
으로써 향후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쌍방 군사당국의 보장과
지원이라는 선례를 마련하였으며
 - 공사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
함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
이 조성될 것임.
- 철도·도로의 착공으로 남북관계가 '선언적 단계'에서 '실천적
단계'로 접어들었으며

- 남북간 인프라가 구축되어 물류비 절감, 수송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임.
- * 남북 철도망이 연결될 경우 인천-남포간 운임은 해상운임의 1/4수준인 TEU(20피트 컨테이너)당 200달러 이하가 될 것이며, 운항 일수도 1/5수준인 2일정도가 될 것임.
- o 또한 남북간 직교역로 확보로 남북교역이 '간접교역'에서 '직접 교역'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어
 - 우리 기업들의 북한내 임가공 및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,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.
- o 민족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핵심축을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연결하는 의미도 있음.
 -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, 인천공항의 허브(hub)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
 - 동해선은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 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.
- o 특히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가 중국횡단철도(TCR)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(TSR)와 연결되면
 - 중국 및 시베리아의 시장과 자원개발 활용이 용이해지고
 -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'동북아 물류 중심국가'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
 - 남북한·일본·중국·러시아 지역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임.
- * 유럽 내륙지역과의 수송시 현재 해운수송에 비해 수송비와 수송시간이 약 3/5까지 절감

② 개성공단 건설

-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 아·태간 합의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 동안 남북관계 소강상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왔음.
- 금년 8월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」에서 '개성공단 건설의 금년내 착공'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「종합경제협력단지」 건설이 가시화 됨.
- 특히 당국간 회담 최초로 북한이 “개성공업지구법”의 제정·공포를 약속하였으며, 이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 조건이 해결됨.
 - “개성공업지구법”이 제정·공포되면 개성공단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등 개성공단 건설의 기반이 정비될 것임.
 - * 2000.12, 우리측 사업자는 북측에 토지 장기 무상 임대, 시설물 소유권 보장, 동남아 수준의 임금, 각종 조세 및 공과금 면제 또는 최소화, 자율적인 노무관리 등을 반영토록 관련법(안)을 제시한 바 있음.
- 10월중 개최될 「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」에서는 통행·통신·통관 등 제도적 장치 및 전력·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당국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임.

< 개성공단 건설 사업 개요 >

- ▷ 위 치 :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
- ▷ 면 적 : 총 2,000만평(공단 800만평, 배후도시 1,200만평)
- ▷ 소요기간 : 3단계에 걸쳐 8년간 단계적으로 개발
 - 1단계 : 100만평(완공에 1년 소요)
 - * 우선 300-400개의 노동집약적 사업체 입주 예상

- 공단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,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되어
 - 우리 중소기업, 특히 신발·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.

- 또한 공단이 지리적으로 우리측에 인접해 있고 개성시를 배후 도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
 - 남북을 연결하는 '물류중심지'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
 -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선도하는 '경제협력 시범단지'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.

- * 서울에서 2시간(78Km) 이내 접근이 가능한 개성공단이 건설되면, 경의선(육로), 인천국제공항(공로), 인천항(해로)을 통해 김포·송도 지구 등 수도권과 연결

개성공단 개발사업 추진경과

- ▷현대-북측 아태,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(2000.8)
- ▷현대-토지공사,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(2000.11)
- ▷현지측량 및 지질조사(2000.11)
- ▷현대-북측, 공단 특별법 및 규정에 대해 협의(2001.1)
- ▷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, 연내 착공 합의(2002.8.30)
 -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
 - 북측은 "개성공업지구법"을 곧 제정·공포,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
 -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 개성에서 개최

③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

<임진강 수해방지>

-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'11월중 현지조사'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수자원협력이 본격 개시될 것임.
- 임진강 유역 현지조사는 예보시설 설치, 하천준설, 제방축조 및 다목적 댐 건설 등 수해방지 대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임.
 - 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 자료 통보와 묘목제공을 활용한 치산 치수 사업을 통해, 매년 되풀이되던 임진강 유역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하고,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남북이 함께 홍수 등 재해를 방지하고, 장기적으로 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
 -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하고,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터전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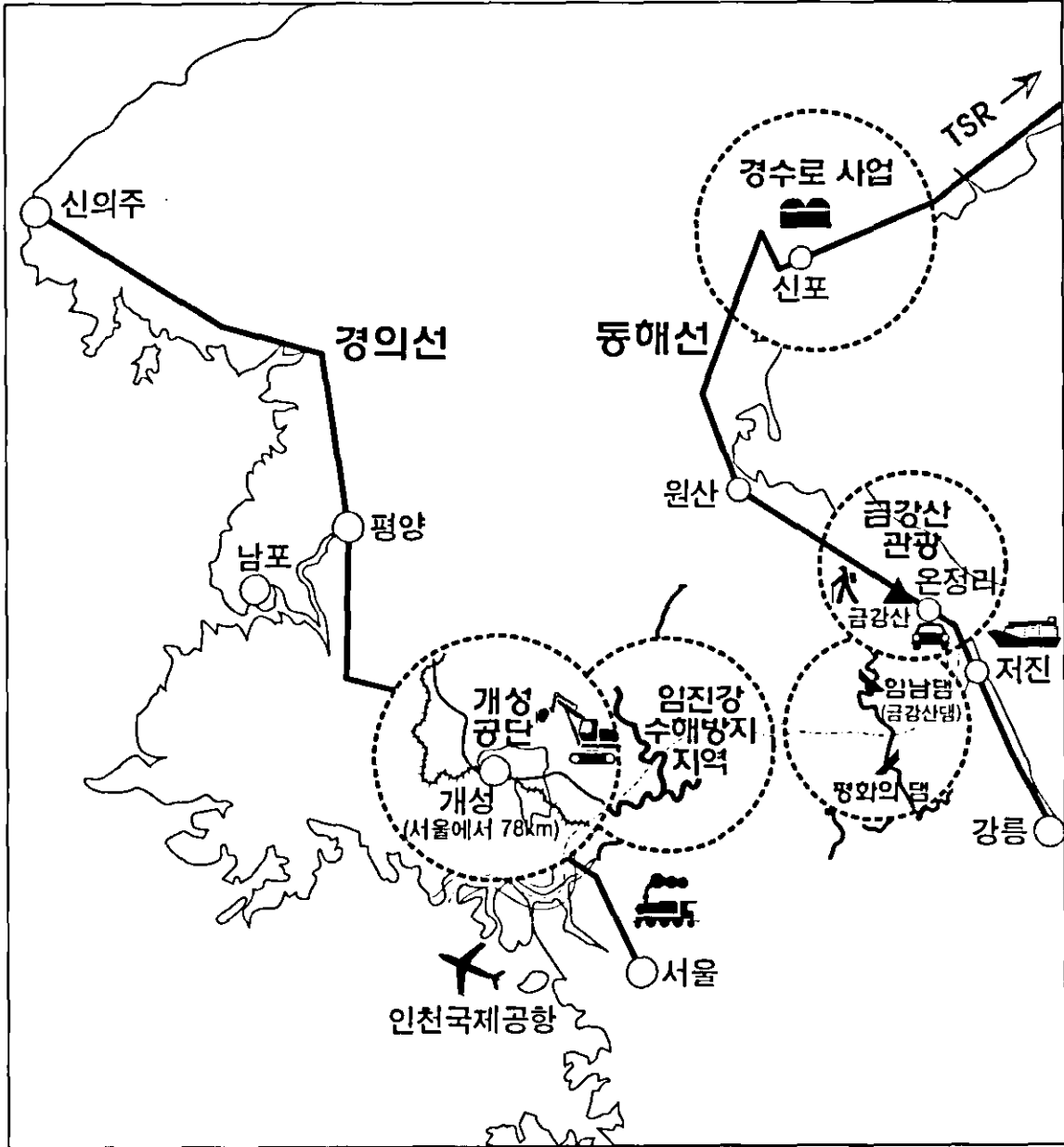
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추진경과

- ▷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공동추진에 합의(2000.9.1)
- ▷ 김용순 특사 방문시 공동조사 등에 합의(2000.9)
- ▷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(2001.2.21~24, 평양)
- ▷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추위 제2차 회의시 논의기로 합의(2002.8.14)
- ▷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1월중 현지조사 합의(2002.8.30)
 - 군사당국자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 착수
 - 북측은 '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 등에 관한 자료' 통보, 남측은 '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' 제공
 -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 개성에서 개최

<임남댐 공동조사>

- 북한이 건설한 임남댐(금강산댐) 안전문제에 대해 금년 4월 이후 국내외로부터 우려가 제기되었음.
 - 우리 정부는 건교부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(6.3), 임남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조사 등 협의를 촉구한 바 있음.
- 이에 북측이 「제7차 남북장관급회담」에서 임남댐 공동조사를 수용함에 따라
 - 9월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「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」이 개최되었으나
 - 임남댐 공동조사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북측과의 입장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.
- 하지만 임남댐 안전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북측이 공동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
 - 임남댐의 안전성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 - * 회담 직후인 9.19 조선중앙TV는 '임남댐 공동조사가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북남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'고 보도
- 정부는 앞으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수자원 협력 확대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며
 - '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'를 '수자원 협력 실무협의회'로 확대 개편해 나가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
주요 남북협력사업 지역



○ 부분은 바탕지도보다 확대된 것입니다.

4] 4개 경제협력 합의서

- 금년 8월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」에서는 '투자보장', '이중과세 방지', '상사분쟁 해결절차', '청산결제'의 4개 경제협력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음.
- * 4개 경제협력합의서는 제4차 장관급회담(2000.12)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, 그 동안 남북관계가 다소 소강국면을 맞게 되면서 발효가 지연되어 왔음.
- 특히 북측이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4개 경제협력 합의서의 발효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
 - 우리 정부도 국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4개 경제협력합의서의 발효를 위한 대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임.
- * 2001년 6월, 우리 정부는 발효를 위해 4개 경협합의서 체결동의안을 국회에 제출, 금년 9월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
-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임.
- 이들 경협 관련 4개 합의서는 발효와 함께 남북간의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
 - 향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될 실무협의회를 통해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, 통행·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새로이 확충해 나갈 것임.

〈 4개 경제협력합의서 요지 〉

투자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자산 보호· 송금· 출입· 체류 등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 보장
청산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산결제의 대상품목· 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,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규정 · 청산결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인 일반결제방식 적용
이중과세 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소득, 이자· 배당· 로열티 등 과세대상 소득 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여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방지 · 조세정보의 교환, 조세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등도 명시
상사분쟁 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동분쟁해결기구인 <남북상사중재위원회>의 구성, 기능, 분쟁해결절차 등 규정

4개 경제협력합의서 추진경과

-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4개 경협 합의서 타결(2000.11)
-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4개 경협 합의서 서명(2000.12)
- 합의서 조속한 발효 및 후속 조치 논의를 촉구하는 대북서한 전달(2001.5)
- 우리측 4개 경협합의서 체결동의안 국회 제출(2001.6)

5 금강산관광 활성화

- 1998년 11월 개시된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사업으로서 그 동안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갖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크게 기여하였음.
-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는 2001년 6월,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북측 아·태와 협의를 통해 ①금강산 육로관광사업 추진 ②관광특구 지정 ③관광객 수에 따른 대가 지급에 합의하였으나
 -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합의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.
- 한편, 금년 1월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간 평화와 교류에 기여하는 점과 관광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감안하여,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.
 - 이산가족·학생·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보조, 금강산 현지에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등
 - *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, 우리 국민 77.4%가 관광 지속을, 59.6%가 정부의 지원을 지지(2002.1.2, 2002.1.24)
- 금년 9월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「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」에서는
 - 오는 12월초에 육로관광을 시작한다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, 해로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는데도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음.
 - 그러나 사업자간 해결할 사항과 당국간 협력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,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임.
 - * 11월 말까지 동해선 임시 도로가 개통되면, 12월초에는 시범적 형태의 육로관광이 이루어질 것임.
- 9월 현재 관광특구 지정, 육로관광 등과 관련한 사업자간 협의가 진행중이며, 이를 통해 금강산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 공동 번영의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임.

⑥ 경수로 건설

- 경수로사업은 1994년 미-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
 - 한국, 미국, 일본, EU가 중심이 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(KEDO)가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표준형 경수로 발전소 1,000MWe급 2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임.

- 경수로사업은 1997년 8월 시작된 '부지정지공사'가 2001년 8월 완료되고, 2000년 2월 주계약(Turn-Key Contract) 발효로 '본공사' 단계로 진입하였음.
 - 2001년 9월에 발전소 본관 '기초굴착공사'를 착공하였으며
 - 금년 8월에는 본관 '콘크리트 타설'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9월 말 현재 24%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음.

- 또한 본공사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공사인 부지인근 진입도로 27km, 취수방파제 및 물양장, 용수공급시설, 생활부지내 각종 생활시설 등의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.

- 경수로사업은 우리의 기술,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고 많은 남북한의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, 남북간 인적·물적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.
 - * 남측 754명, 북측 98명, 우즈벡 인력 631명 등 총 1,500여명이 근무 중

- 또한 경수로사업 기간 중 원전 운영인력과 규제요원 등 북한인력이 남한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됨.
 - 2001년 12월 북한의 원자력 고위관계자 19명이 국내 원전시설을 시찰하였고, 금년 7월에는 북한측 원전 규제요원 25명이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음.

- 현재 북한측 원전 운영인력 123명이 금호지구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금년 말부터 국내훈련을 시작할 예정임.
- o 경수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해상통행로를 통한 '객화선 운행'을 증편하여 주 1회 정기적으로 인력을 수송하고 있으며
 - 양양선덕간 '남북직항공로'를 개설하여 금년 7월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, 10월 중순 두 번째 비행을 예정하고 있음.
- o 현재 금호지구에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전용통신망 16회선과 부지내 통신설비가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
 - 향후 보다 원활한 통신과 경수로 건설과정에서의 대용량 통신 수요 등을 감안한 '독자위성통신망' 설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할 예정임.

< 경수로사업 자원분담 >

- ▷ 1998년 10월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건설 예상사업비를 총 46억불로 하는 "자원분담결의"를 채택
- ▷ 우리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응하여 사업비의 70%인 32.2억불을 부담
 - * 2002년 7월까지 총 공사비 9억 5,400만불 중 6억 6,500만불의 건설공사비를 분담
- ▷ 경수로사업비는 경수로 완공 후 3년 거치 17년간 북한이 KEDO에 상환
 - * 우리가 부담하는 경수로사업비는 한국전력 및 국내 협력업체들을 통해 근로자 인건비와 설계비 및 자재비 등으로 국내경제에 환원되어 국내 고용창출과 내수확대에 기여

4. 평화와 화해 분위기 정착

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와 군사 Hot-Line 설치

- 금년 9월 19일부터 남과 북은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열고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.
 - 우리측은 지뢰제거 작업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400m 지점까지 1600m 구간을 6곳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중임.
 - * 우리 공병여단 장병들은 신형지뢰제거 장비인 '마인 브레커(독일제)'를 투입, 대인지뢰 및 대전차지뢰 등을 제거
 - 북측은 경의선·동해선 연결 지역에 군병력 7,500명과 장비 60여대를 각각 투입해 지뢰 제거, 노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.
 - * 금년 10월 3일 현재, 북측은 전체 구간중 30% 정도 구간에서 지뢰제거를 했다고 언급
- 그 동안 닫혀있던 비무장지대를 열고 남북간 철도·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간 긴장과 대치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.
- 또한 2002년 9월 24일 우리측 도라 관측소(OP) 육군 제1건설단 종합상황실 ↔ 비무장지대 북측 봉동역 주변 북한군 상황실간에 직통전화(Hot Line)가 개설되었음.
- 경의선 공사에 따른 실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간 직통 전화이긴 하나, 남북의 군 당국자간 직통전화는 개성공단 이후 처음임.

- * 군사 실무자간 직통전화는 자석식 전화 1회선, 팩스 1회선으로 매일 오전 7시~7시 30분경에 시험통화를 하며, 오후 4시까지 운용됨.
- 군사직통전화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국방장관간 설치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으나, 지난 10여년 동안 이행되지 못하다가 경의선 공사를 계기로 실무자간에 개설된 것임.
- 군사직통전화 설치에 공사 진행과 관련된 실무문제 협의뿐만 아니라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라 할 수 있음.
- 한편, 2000년 9월 2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군 최고 당국자가 마주 앉은 「남북국방장관회담」에서 쌍방은 「6.15 남북공동선언」 이행에 따른 군사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.
 - 또한 '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공동 노력'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음.
- 향후 철도·도로 연결, 개성공단 건설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, 한 단계 높은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「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.

② 평양 현지 생방송 실시 등 교류 활성화

<언론·방송 분야 교류>

- 금년 9월 평양 조선중앙방송국에서는 우리측 뉴스 진행자가 현지에서 우리측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였으며, 이는 남측 전역에 그대로 생중계 되었음.
- * MBC(9.11~14)와 KBS(9.16~20)는 서울의 스튜디오와 평양의 조선중앙TV 스튜디오를 위성으로 연결, 평양에서 북한 소식을 직접 전하는 이원 생방송을 진행
- * 당시 우리측 방송기자들은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둔 북측 선수단, 평양 거리, 남북합작생산 공장 등을 취재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였음.
- 이러한 언론·방송분야에서의 교류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우리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계기로 활성화되었으며, 그 동안 개별 언론사의 방북 취재가 꾸준히 이루어졌음.]
 - 2000년 9월 KBS는 「한민족 특별기획 3원 생방송 - 백두에서 한라까지」를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공동 제작해 생방송 하였고
 - 2001년에는 KBS, MBC에서 「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」, 「보도 특집 - 북한의 관광산업」, 「여기는 평양입니다」, 「백두 고원을 가다」, 「북한의 10대 문화 유산」등을 현지에서 제작·방영하였음.
- 금년 8월 평양을 방문한 우리측 방송위원회 산하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와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'남북간 방송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것'에 합의하였음.

* 주요 합의 사항

- ① 2003년도 상반기내에 남북방송인 학술토론회를 개최,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금년내 개최
- ② 남과 북이 제작한 비정치적 분야의 방송편집물 목록을 교환, 방송영상물 소개 모임을 개최
- ③ 이를 위해 북측은 방송편집물 공동제작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, 남측은 북측에 필요한 방송설비를 제공

- 이러한 합의에 따라 향후 남북간 방송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.

- 한편, 조선중앙TV는 금년 6월 월드컵축구대회 우리측 선수들의 경기를 녹화 방송한데 이어, 9월 7일 열렸던 『남북통일축구경기』를 9월 8일에 녹화 방영하였음.

* 북측은 월드컵 방송시에는 우리 경기장의 생생한 열기를 담은 현장음을 삭제하고 방송했으나, 통일축구 방송시에는 현장음을 그대로 살려 방송함으로써 다소 개방된 모습을 보임.

<문화·예술 분야 교류>

- 문화·예술분야에서는 금년 9월에 『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』 공연이 서울과 전주에서 2차례 개최되었으며,
- 금년 추석을 계기로 KBS 교향악단이 평양을 방문(9.16~22)하여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단독공연(9.20) 및 북측과 합동공연(9.22)을 실시하였음.
- 이 공연은 2000년 8월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연을 가진데 대한 답방 형식이었으며, KBS와 조선중앙TV를 통해 남북 전역에 동시 생중계 되었음.
- 9월 27일과 29일에는 평양에서 『2002 MBC 평양 특별공연』이 개최되었음.

- * 북측은 윤도현 등 우리측 신세대 대중가수가 참가하는 공연을 TV로 생중계하였고, 이는 남북간 문화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.

주요 문화·예술 분야 행사

- 1998년 : 『리틀엔젤스 평양공연』, 『윤이상통일음악회』
- 1999년 : 『평화친선음악회』, 『민족통일음악회』 방북공연
- 2000년 : 『평양학생소년예술단』, 『평양교예단』, 『조선국립교향악단』의 서울공연
- 2001년 : 『춘향전』 평양 공연, 『민족옷 전시회』, 『남북공동사진전』

<체육 분야 교류>

- 체육분야에서도 금년 9월 7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『남북통일 축구경기』가 열렸고,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측 『태권도 시범단』이 평양을 방문, 태권도 전용경기장인 '태권도전당'에서 시범공연을 가졌음.
- 10월 하순에는 북측 『태권도시범단』이 서울을 방문하여 시범 경기를 갖게 될 것임.

주요 체육 분야 행사

- 1999년 : 『통일농구경기대회』, 『남북노동자축구대회』
- 2000년 : 『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남북 동시입장』, 『통일탁구경기대회』
- 2001년 : 『금강산 국제자동차경주대회』, 『금강산 모터사이클투어링』

- *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참가는 본문 p.34~35 참조

<민간단체 분야 교류>

- 민간단체 및 노동·농민 단체들은 6·15 남북공동선언, 8·15 광복절 등을 계기로 남북공동행사를 금강산지역에서 개최하였음.
 - 금년 4월에는 각계 단체 대표들이 금강산지역에서 '특사 방북시 공동보도문(4.5) 적극 지지 등' 5개항의 '남북 단체 공동성명'을 발표하였음.
 - 6월에는 민화협·통일연대·7대종단 등 208명이 참가하는 '남북 공동선언 2주년 기념 통일대축전'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였음.
 - 8.15 광복절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된 「8.15민족통일대회」에는 북측인원 116명이 대거 참가하여 우리측 인사들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음.
 - * 8.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차 서울에 온 여운형 선생의 딸 여연구씨는 서울에 있는 부친의 묘소를 참배하고, 우리측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'여운형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 청원'에 인터넷으로 서명함.
- 5월에는 제주도민 255명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, 이어 박근혜 의원이 「유럽-코리아 재단」 이사 자격으로 방북,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였음.
- 10월 3일에는 남측의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와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회의 합의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행사가 공동으로 개최되었음.

남북 직항로 운영 현황

- ▷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열린 남북한 항공 직항로가 금년 9월말 현재 103차례(남→북 48회, 북→남 55회)에 달하고 있음.
 - 2000년 : 미 국무장관 방북 등 43회(남→북 20회, 북→남 23회)
 - 2001년 : 이산가족상봉 등 19회(남→북 8회, 북→남 11회)
 - 2002년 : 제주도민 방북 등 41회(남→북 20회, 북→남 21회)
- ▷ 우리측은 인천, 서울(성남), 김포, 오산, 제주, 김해(부산), 양양 공항을 이용하였으며, 북측은 평양, 선덕 공항을 이용함.

「국민의 정부」 남북인적왕래 및 교역 현황

(1998.3~2002.8)

<방북 인원> : 총 31,613명

1998년 (3월부터)	1999년	2000년	2001년	2002년 (8월 현재)
3,317명	5,599명	7,280명	8,551명	6,866명

- * 금강산 관광객 476,583명 별도(2002년 8월말 현재)
- *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총 방북인원 34,018명의 92.9%
- * 1일 평균 북한 상주인원 : 800~1,200명(기업인, 경수로 인력 등)

<방남 인원> : 총 1,195명

1998년 (3월부터)	1999년	2000년	2001년	2002년 (8월 현재)
-	62명	706명	191명	236명

- *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자 668명(선수단 312명, 응원단 356명) 별도
- * 1989년 이후 총 방남인원 1,770명의 68%

<교역 현황>

(단위 : 억불)

1998년 (3월부터)	1999년	2000년	2001년	2002년 (8월 현재)
2.2	3.3	4.3	4.0	2.8

- * 금년 1~8월말까지 교역액 2.8억불은 전년동기 대비 11% 증가
- * 98년 2억불 규모에서 2000년이후 연간 4억불 규모로 증대

③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

- 2002년 9월 29일 『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』 개회식에 남과 북은 'KOREA'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에 입장하고 성화를 남과 북 대표가 함께 점화함으로써
 -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에 과시하였음.
- * 2002.9.23 북측 선수단 1진 159명, 9.27 선수단 2진 153명이 김해 공항에 도착, 9.28 북측 응원단과 기자·선원 등 356명이 '만경봉-92호'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하였음.
- * NOC·IOC위원 4명, 임원 121명, 선수 168명, 심판 12명, 응원 280명, 기자 15명, 선원 68명(총 668명)
- 북한은 1990년과 2002년 통일축구, 1999년 통일농구대회에 선수단을 보낸 적이 있지만,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종합대회에 선수단을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임.
 - * 북한은 아시아 경기대회 사상 가장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했으며, 종합 4위를 목표로 함.
- 부산·경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'북측 대표팀 서포터스'는 '한반도기'를 흔들며 북한 선수단을 환영하고, 각종 경기에서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였음.
- 한편, 지난 9월5일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9월6일 금강산에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전달되었으며, 9월7일 임진각에서 한라산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화(合火)되었음.
 - * 그 동안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금강산에서 성화가 채화된 적은 있으나, 백두산에서 성화가 채화되기는 처음임.

-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(OCA) 44개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명실상부한 “평화와 화합의 아시아드”를 실현하게 되었음.
- 대규모 북한 선수단의 참가는 남북 화합의 한마당을 조성하고 남과 북이 ‘평화와 협력’으로 가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향후 남북대화 및 분야별 교류협력에 긍정적 효과가 유발될 것임.

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경과

-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, 북측 선수단 초청서한 발송(2001.10)
- 특사 방북시 참가 제의(2002.4)
- 조직위, 대북서한을 통해 성화채화, 대회참가 등 촉구(6.1)
- 북측,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참가 결정(8.2~4)
-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참가 재확인(8.12~14)
-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(8.17~19)
 - *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간 회담
- ‘제2차 실무접촉에서 파견규모, 공동입장, 성화채화 등 14개항 합의(8.26~28)
- 북측 선수단 1진 159명 김해공항 도착(9.23)
- 북측 선수단 2진 153명 김해공항 도착(9.27)
- 북측 응원단 356명 부산항 도착(9.28)
-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, 남북 대표 성화 공동 점화(9.29)

4] 이산가족 상봉, 면회소 설치

-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징표로서, 정부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,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여 왔음.
- 특히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「제4차 남북적십자회담」을 통해
 -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, 생사·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사업의 규모확대, 행방불명자들의 생사확인 등 6개항에 합의함으로써
 - 이산가족문제 논의 30여년만에 비로소 제도적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였음.
- *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1년 이후 진행된 적십자회담 역사상 최초의 적십자 총재회담이었음.
-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우리측은 6.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적십자회담,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.
 - 그 동안 남과 북은 면회소 설치 장소문제에 대해 토론을 거듭하여 우선 동부지역에는 금강산지역에 설치하고, 서부지역에는 경의선 철도·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.
 - * 이는 향후 동해선 철도·도로가 연결되면 금강산지역에서의 상봉에 따른 편의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는 점과 남북관계의 상징적 측면을 고려한 것임.
 - 금강산지역 면회소는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되, 착공일자는 지질조사, 설계 등의 공정에 맞추어 결정될 예정임.

- 금강산지역 면회소가 완공되면 남북은 이산가족의 면회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, 첫 면회 시기는 10월중에 개최될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협의·확정할 예정임.
- 이산가족들의 생사·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
 - 1972년 제2차 적십자회담에서, 이산가족문제 해결 5대과제(생사·주소확인, 서신교환, 상봉, 재결합, 기타 인도적 문제)에 합의하고
 - 6.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난 2년 동안 생사·주소 확인, 서신교환, 상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, 이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음.
 - * 5차례의 방문단 교환과 두 차례의 생사·주소확인 등을 통해 금년 9월말 현재 11,848명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였고, 662명이 편지를 교환하였음.
- 또한 6.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 확인 사업을 협의·해결하기로 함으로써
 - 그 동안 북측이 존재 자체를 부인해오던 국군포로 문제를 적십자 차원에서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됨.
- '한편 추석을 계기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짐으로써,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섯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통해 총 5,400여명의 가족들이 상봉하였음.

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실적

· 1차	: 2000. 8. 15 ~ 8. 18	1,170여명
· 2차	: 2000. 11. 30 ~ 12. 2	1,220여명
· 3차	: 2001. 2. 16 ~ 2. 18	1,240여명
· 4차	: 2002. 4. 28 ~ 5. 3	849명
· 5차	: 2002. 9. 13 ~ 9. 18	875명

-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.
-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을 연장(2년→5년) 하고 북한방문 절차를 간소화하며
- 민간차원의 교류를 추진하는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사확인시 80만원, 상봉시 180만원, 교류지속시 4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.
- * 1998년부터 2002년 9월말까지 1,120건에 대해 총 11억 5,552만원을 지원
- 「국민의 정부」 출범 이후 2002년 9월말까지 정부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3,293건, 서신교환 3,958건, 상봉 1,783건 등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.

< 이산가족 교류 증가 현황 >

구 분	연평균 실적	과거 ('90~'98.2) 대비 실적
생사확인	718건	6.0배
서신교환	864건	1.7배
상 봉	389건	15.6배

⑤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

- 정부는 1995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, 비료 등을 지원해 오고 있음.
-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,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'평화유지비용'이라는 측면도 있음.
- 이러한 '평화유지비용'은 대외경제신인도를 향상시켜 외자유치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회복에도 큰 이익을 주고 있음.
- 또한 대북지원은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함으로써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함.
- 현 정부 출범 이후 금년 8월말 현재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대북 지원 금액은 총 5,320억원(42,058만불)로, 연평균 1,182억원(9,346만불)이며, 국민 1인당 연평균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2,480원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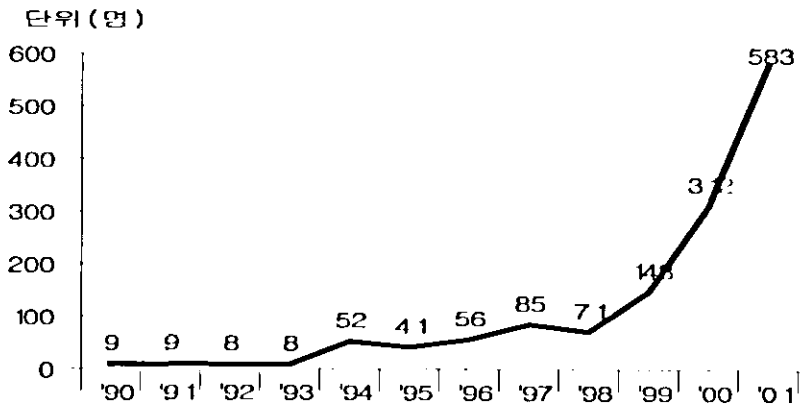
- * 현 정부의 정부와 민간차원의 연평균 대북지원액 1,182억원(9,346만불)은
 - 1972~1989년까지 서독의 대동독 연평균 지원액 32억불(총 580억불)의 약 1/34
 - 지난해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유·무상지원인 공적개발원조(ODA) 2억 6,600만불의 약 1/3
 - 연간 8조원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4,000억원의 약 1/4
 - 금년도 재고쌀(약 1,380만석, 119만톤) 보관 비용 1,148억원을 약간 상회

- 정부는 대북 직접지원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,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사업에도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으며, 2002년에는 옥수수 10만톤(WFP), 말라리아 방역 사업(WHO) 등을 지원하였음.
- 정부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주로 식량, 비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긴급구호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
 -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지원과 보완적 구도로 추진되어, 농자재 지원, 결핵 퇴치, 삼림 복구 등으로 전문화·세분화되고 있음.
- 한편 금년 8월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」에서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당국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하고, 비료 1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.
 - 이는 그 동안 국회에서의 논의, 농민단체·종교단체의 요청 등 대북 쌀지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.
 - 이러한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은 상거래적 의미를 띠고 있어, 장기적으로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임.
- * 차관제공 조건 : 10년 거치 20년 상환, 이자율 1%(2000년과 동일)
- 정부는 대북지원 과정에서 분배결과 통보·분배과정 현장 확인 등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,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.
 - 이번에 북한에 지원하는 쌀과 비료 포대에 '대한민국'을 명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남측의 지원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음.
- * 2000년 지원시에는 'ROK'로 표기

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
-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3년간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음.
- 특히 2001년 6월 장길수군 가족 7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(UNHCR) 베이징사무소 진입 이후
 - 2002년에는 북한이탈주민 25명이 베이징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는 등 중국주재 한국대사관, 외국대사관을 통한 소위 '기획망명' 10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음.
- 금년 8월에는 북한주민 세 가족 총 21명이 어선을 타고 평북 선천에서 탈출하는가 하면, 중국내 독일학교에 진입하는 등 북한이탈 경로가 다양해지고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증하고 있음.
- * 금년 8월말 현재 71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, 연말까지는 1천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
- * 1990년 이후 금년 8월말 현재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는 총 2,707명

< 북한이탈주민 입국추이 >



- 정부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추세에 부응하여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「하나원」을 확장하는 한편
 -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고
 - 중앙-지방, 정부-민간을 포함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내실화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·자활기반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.
- 「하나원」은 1999년 개원 이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 - * 금년 8월말까지 총 1,443명이 「하나원」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
- 정부는 「하나원」 교육후 사회정착단계에서의 기초적인 생계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착금, 주거지원, 생활보호, 의료보호, 교육보호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.
- 특히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취업확대를 위해
 - 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공공·시설훈련기관에서 거주보호기간(5년)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.
 - *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정보처리·중장비·요리 등 42개 직종에 454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함.
- 또한,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최고 월 70만원까지 2년간 지급하는 '취업보호제'를 운영하고 있음.
 -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58개 사업체에 267명이 취업하였으며, 북한이탈주민의 자립·자활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함.

- 한편 '북한이탈주민지원법'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「북한이탈주민후원회」를 통해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상담 및 위로행사, 민간단체 후원사업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.
- 또한,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간 네트워크(「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」)을 구성하여
 - 결연, 학습, 문화탐방,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.
-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자치단체와 민간후원단체, 고용사업체 등을 망라하는 「지역협의회」(10개 지역)를 구성하여
 - 사회적 지원연계망을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·민간의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.

5. 북한의 변화 가속화

㉠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

-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
 - 2001년 10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회주의 원칙 고수 아래 최대한의 실리를 도모하기 위한 「경제관리 개선지침」을 제정하고, 2002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.

< 경제관리 개선조치 주요내용 >

▷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

- 「당간부」가 행사하던 기업경영권을 「지배인」에게 이양
-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과 초과이윤을 기업이 모두 「재투자 재원」으로 자체활용

▷ 「노무관리」 개선

- 사무직을 축소하고 잉여 인력을 생산부문에 투입
- 매주 실시하던 의무적인 「금요노동」 폐지

▷ 「개인 경작지」 확대

- 개인이 임의로 개간·경작할 수 있는 토지(텃밭, 돼기밭) 규모를 30~50평에서 ⇒ 400평으로 확대
-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 주어 경작토록 하는 개인 영농제도 시험적 실시(함북 회령·무산 등)

▷ 식량·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축소·폐지

- 종래 국가가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배급하던 것을 주민들이 식량판매소·국영상점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
- * 매점매석 등 부작용 방지 위해 구매권 발급은 지속
- * 군·보위부·보안성과 취학아동은 당분간 배급제 유지

▷ 물가·임금 대폭 인상

- 식량·생필품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과 비슷한 평균 25배 인상 고시

* 쌀(kg당)8전 → 44원(550배)

* 돼지고기(kg당) 7원 → 170원(24배)

- 노동자·사무원 등 평균 임금 18배 인상

* 일반노동자 110원 → 2,000원(18배)

* 중노동자 240~300원 → 6,000원(20~25배)

▷ 「환율·관세」 조정

- 종래 고평가된 북한 원화의 환율을 나진·선봉지역 수준으로 현실화 (1\$당 2.2원→153원)

-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2배 인상

○ 이번 조치는 기업경영, 분배제도 뿐 아니라 농업·무역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 획기적인 것으로

- 1998년 새헌법 제정, 1999년 인민경제개혁법 채택 등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실험 추진되던 경제 관리 개선 노력의 확대라는 측면이 있으며

-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등 중국의 초기 개혁정책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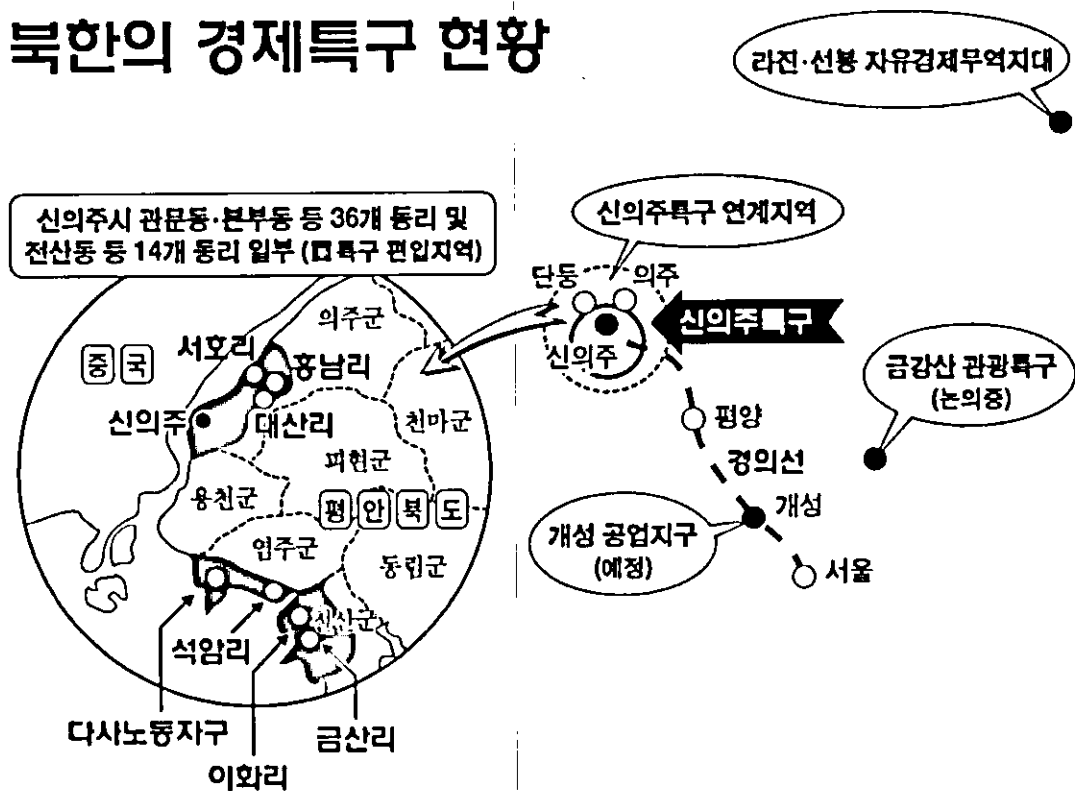
○ 외부 자본의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 조치의 성공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.

* 최근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에 따르면, 북측의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평양 시내에는 간이매대(가판대)가 늘어나고, 판매인·노동자들의 근로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함.

②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

- 북한은 9.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「신의주특별행정구」를 지정한 이후 「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」 발표(9.19),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·운영에 관한 합의서' 체결(9.23), 특별행정구 장관 임명(9.24)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였음.
- * 「신의주특별행정구」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, 염주군, 철산군의 일부를 관할,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

북한의 경제특구 현황



- 북한이 9월 19일 발표한 「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」은 ①정치 ②경제 ③문화 ④주민의 권리·의무 ⑤기구 ⑥구장·구기 (區章·區旗) 등 총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음.

〈 「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」 요지 〉

구 분	내 용
정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는 행정구에 입법권, 행정권, 사법권 부여 - 향후 50년간 행정구 법률제도 불변 - 중앙은 외교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불관여 - 행정구 명의로 대외사업, 여권 발급 가능
경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는 행정구에 토지 개발·이용·관리권 부여 - 국제 금융, 무역, 상공업, 첨단과학, 오락, 관광지구로 개발 - 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말까지 - 국가는 행정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 보장 - 행정구내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
문 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는 문화분야의 시책을 실시하여 행정구 주민의 창조적 노력과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 - 첨단 과학기술 수용,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개척
주 민 권리·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은 성별, 국적, 민족, 인종, 언어, 재산·지식정도, 정견, 신앙에 따라 차별 없음 - 외국인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 부여 - 다른지역 및 외국으로의 이주, 여행은 행정구에 위임
기 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법회의가 입법권 가짐 - 입법회의 의원은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 - 입법회의 의장,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선거 - 장관은 행정부의 책임자이자 대표 - 장관은 행정부 및 구검찰소장 인사권 가짐 - 검찰은 구검찰소, 지구검찰소 관할 - 재판은 구재판소, 지구재판소 관할
구장, 구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구는 국가의 상징물 외에 독자적인 구장, 구기 사용 - 행정구에는 공화국 국적, 국장, 국기, 국가, 수도, 영해, 영공,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치 않음

○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입법·행정·사법 등 3권을 갖고, 독자적 구장·구기를 사용하며, 내각, 중앙기관의 국가 간섭 배제 등 자치권이 크게 확보되었음.

○ 중국의 홍콩, 심천(深圳), 상해(上海)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·원용한 것으로 평가되며, '90년 「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」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특징임.

* 중앙직속기관 설정, 외교권 제외, 50년 기한 설정 등

-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, 무역·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해와 비슷하며, 단동을 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과도 비슷함.

○ 따라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정치·행정적 제도와 심천·상해(深圳·上海)의 경제개방경험을 선별 수용하여 병합한 '북한식 개방 모델'로 볼 수 있음.

○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상품 및 노동,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경로가 「국제사회 ↔ 신의주특별행정구 ↔ 북한 내륙」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

-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'경제개방 완충지대'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됨.

○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대내적 경제 개혁을 위한 조치라면, 이번 특별행정구 지정은 대외적 경제 개방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

- 신의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방, 국제적 차원의 금융·유통·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.

- 앞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외국 기업(특히 중국)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, 입법의회 등 조직을 구성하며, 시장원리 도입 범위를 확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.

〈 북한·중국 경제특구 비교 〉

구분	북한		중국	
	신의주 특별행정구	나진·신봉 경제무역지대	홍콩 특별행정구	심천(深圳) 경제특구
위치	평북 서부 중국집경	함북 북동부 러시아 집경	중국 대륙 남동부	홍콩 인근 광둥성
인구	34만명	30만명	6백78만2천여명	7백만8천여명
면적	132km ²	746km ²	1,091km ²	391.7km ²
지정일	2002년 9월	1991년 12월	1997년 7월	1980년 8월
법적근거	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(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)	정부원 결정 84호	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	광둥성 경제특별연구 조례
정치제도	-입법·사법·행정권 보장 -토지 임대기간 50년 보장 자세적인 야권 방금 -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정권이 자율적으로 통치	-무역성과 나진시 인민위원회가 통치하는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 -중앙정부 직접 통제속에 외국자본 유치 노력	-일국양제(一国两制) 중국의 사회주의 속에 자본주의 인정 -입법·사법·행정 자율권 보장 -임기5년의 행정장관이 독자적으로 영도 -정치적 독자권 소유	-중국 정부와 광둥성 지방정부 소속 -정치적 독자권 없음
경제지위	-서해에 인접 중국 교역에 유리 -금융·유통·첨단과학기술·서비스산업 예상	-동해에 인접, 러시아 교역에 유리 -화학·철강 등 중공업 중심	-무역·가공산업·금융 중심지 -의류, 전기기기 및 부품, 통신·유항 기기 중심 -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1위 (2001년 기준)	-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수출 산업단지 -홍콩과 마카오에 인접 -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8위 -전자·방직·강공업·기계산업 중심

③ 북·일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

-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.
 - 중국·러시아 등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한편, 미국·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.
- 특히 일본과는 2001년 괴선박 침몰사건,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등 대일관계 악재에도 불구하고, 금년 8월 북·일 적십자회담, 북·일 국장급회담을 연이어 개최하였음.
 - 9월 17일에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, 김정일 위원장과 역사적인 북·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4개항의 「북·일 평양선언」을 발표하였음.
 - ① 10월 중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
 - ②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대북 경협 제공
 - ③ 북한의 피랍 일본인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
 - ④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준수 및 미사일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
- 중국과는 김정일 위원장의 두차례 방중(2000.5, 2001.1) 및 강택민 주석의 방북(2001.9월) 등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회복하였음.
 -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대표적 개방지구인 상하이(上海) 푸둥(浦東)지구의 첨단 산업기지,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하였음. (2001.1.15~20)
 - *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·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'천지개벽', '상상을 초월하는 변모' 라고 표현

○ 러시아와도 정상간 상호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회복하였음.

- 2001년 8월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정상회담 개최 후 8개항의 「북·러 모스크바 선언」을 발표하였으며

- 금년 8월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다음사항에 합의하였음.

- 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
- ② 한반도종단철도(TKR)와 시베리아횡단철도(TSR) 연결
- ③ 북·러간 경제협력 확대

* 2000년 6월 이후 북·러 정상회담 3회 개최(2000.7, 2001.8, 2002.8)

○ 한편, 미국과는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일면 갈등관계를 보이면서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과 의지를 표출하여 왔으며

-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 등 20여명이 미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(10.3~5)하여 미사일 개발, 핵문제,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을 협의하였음.

*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한반도평화와 안정에 직결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

○ 또한 북한은 EU 등 서방국가와 수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.

- 2001년 1월 이후 8개 EU 국가와 새로이 수교함으로써 EU 15개국 중 프랑스,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하였으며

- 그밖에 아·태, 중동, 미주지역 국가와도 관계개선을 추진하였음.

* 2000년 1월 이후 총 17개국과 새로이 수교

6. 향후 추진 방향

Ⅱ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·효율적 추진

- 최근 남북관계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고 경제·군사·사회·문화·체육·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합의사항이 실천되는 등 큰 진전을 보이고 있음.
- 또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(7.1),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(9.12), 북·일 정상회담 개최(9.17), 미국의 특사 파견 수용(10.3)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음.
- 우리 정부는 남북간 합의사항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을 위한 물적·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임.
 - 남북간 합의사항이 국정 전반에 걸쳐있는 만큼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
 - 각종 협력과제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두르지 않고 마무리해나간다는 자세로 접근할 것임.
 - 특히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, 개성공단 건설 등 각종 과제의 실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,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.
- 아울러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·협력하며
 - 북한의 변화 흐름이 더욱 촉진되고, 변화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도 협조해 나갈 것임.

* 제4차 아시아·유럽 정상회의에서 「한반도 평화선언」 채택(9.23)

②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

- 우리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 남북관계 개선,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추동력이며,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될 때 정부도 대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.
 -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이를 존중하게 될 것임.
-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일대 전기가 마련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관계는 '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의 길'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.
- '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'은 국제사회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민족 번영을 위한 과제인 만큼,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.
- 이제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, 쉬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본 틀을 확고히 다지고 이를 유지·발전시켜 나가야 함.
 - 이를 위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, 의지와 노력을 모으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음.
-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진행 추이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.

③ 평화증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조 강화

-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은 ▲대량살상무기 비확산 ▲반테러 국제 연대라는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임.
 -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·미·일 공조는 필수적이며, 한·미·일은 고위급 정책조정회의(TCOG) 등을 통해 대북정책과 국제적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.
 - * 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한·미·일 안보동맹이며, 대북 억지력이 충분할 때만이 '북한의 국제사회에 편입'이라는 대북포용도 가능
-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미·일 뿐만 아니라, 중·러 및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.
 -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도적 자세를 갖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함.
- 지난 9월17일 역사적인 북·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·일 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마련되었고
 - 미국도 켈리 차관보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(10.3) 함으로써 그동안 경색되었던 북·미관계도 대화를 통해 해결될 기반이 조성되었음.
 - 따라서 정부는 남북관계와 함께 북·미 관계, 북·일 관계가 원만히 진전되도록, 미·일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것임.
-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평화증진으로 이어지도록 미·일·중·러·EU 등 관련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임.

④

<부록1>

남북관계 주요일정(2002년 9월 이후)

일 자	합 의 사 항
9.5 ~ 8	남북통일축구경기(서울)
9.6 ~ 8	제4차 남북적십자회담(금강산)
9.10 ~ 12	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(금강산)
9.13 ~ 17	철도·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(금강산)
9.13 ~ 18	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(금강산)
9.14, 17	제6·7차 군사실무회담(판문점)
9.14 ~ 17	남측 태권도 시범단 방북(평양)
9.16 ~ 18	임남담 공동조사 실무접촉(금강산)
9.18	경의선 동해선 철도·도로 동시착공
9.29 ~ 10.14	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(부산) 북측 참가
10월 중	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(개성)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(개성)
10.19 ~ 22	제8차 남북장관급회담(평양)
10월 중순	남북적십자 실무접촉(금강산)
10.26	북측 경제시찰단 방문(서울)
10월 하순	북측 태권도 시범단 방문(서울)
11.6 ~ 9	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(평양)
11월중	임진강 수해방지 현지조사 착수
11월말	동해선 임시도로 연결
금년내	경의선 철도 연결
금년내	개성공단 건설 착공

<부록2>

남북관계 주요일지(2000.1~2002.9)

2000년

- 1. 3 김대중 대통령,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
- 1. 5 국가안전보장회의,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 결정
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
③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
- 1.12 한국담배인삼공사, 남북합작담배 '한마음' 남북 동시판매(3. 1) 발표
- 2. 1 한·미·일,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(TCOG)회의 개최(서울)
- 2.17 정부, 「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」 제정·시행
- 2.22~25 KEDO-북한, 고위 전문가회의 개최(평북 향산)
- 3. 9 김대중 대통령, 「베를린 선언」 발표
- 북한경제회복 지원,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,
이산가족문제 해결, 남북당국간 대화 및 특사교환 촉구
- 3. 9 금강산 유람선(풍악호), 부산 다대포항 출항 시작
- 3.17~4. 8 남북 특사접촉(중국 상해, 북경)
-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(남), 송호경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(북)
-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
- 3.23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,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획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항의 「5개섬 동향질서」 발표
- 4.10 남북 정부,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(서울, 평양)
- 4.22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1차 회담(판문점)
- 양영식 통일부 차관(남), 김령성 최고인민회의의 참사(북)

- 4.2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2차 회담(판문점)
- 5. 3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3차 회담(판문점)
- 5. 7 이헌재 재경부 장관 ADB총회에서 북한의 가입 협조 요청
- 5. 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4차 회담(판문점)
- 5. 9~17 「문서교환 방식」을 통한 협의
- 5.13 남북정상회담 제1차 통신·보도 실무자 접촉(판문점)
- 5.16 남북정상회담 의전·경호 실무자 접촉(판문점)
- 5.17 남북정상회담 제2차 통신·보도 실무자 접촉(판문점)
- 5.1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5차 회담(판문점)
- 남북합의서(2000.4.8)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합의서 타결
- 5.24~30 북한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방문, 공연
- 5.29~31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, 중국 방문
- 5.29~6.10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 방문, 공연
- 5.31 남북정상회담 선발대(30명) 방북
- 6.13~15 남북정상회담 개최(평양), 6·15 남북공동선언 채택
- 6.27~30 남북직접회담 개최(금강산)
- 7.19~20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, 북-러 정상회담 개최
- 7.26 남북 외무장관회담(태국 방콕)
- 7.29~31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(서울)
- 박재규 통일부 장관(남),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(북)

- 8.5~12 언론사 사장단 방북
-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, 남북언론사들간 언론 교류 등
공동합의문 발표
- 8. 8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장,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
- 8.14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
- 8.15~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(서울, 평양)
- 8.18~24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방문, 합동공연
- 8.22 현대·북한, 개성공단 개발관련 합의서에 서명
- 8.29~9.1 제2차 장관급회담 개최(평양)
- 9. 2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
- 9. 4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,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
취소
- 9. 6~8 김대중 대통령,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가
- 9. 6 한·중 정상회담 개최(뉴욕)
- 9. 8 한·러 정상회담 개최(뉴욕)
- 9.11~14 북한 김용순 특사 남한 방문
- 9.15 남북선수단, 시드니 올림픽 개최식 공동입장
- 9.18 정의선 기공식(임진각)
- 9.20~23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(금강산)
- 9.22~27 조총련 동포(50명) 남측 고향방문
- 9.22~28 백두산 관광단(109명) 방북

- 9.25~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(제주도)
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(서울)
- 9.27~30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(제주도)
- 9.28 정부, 대북식량차관제공 발표
- 10. 4 우리측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간 「차관계약서」 체결
- 10. 9~12 북한 조명록 특사, 방미
- 미·북 공동선언 발표(10.12)
- 10. 9~14 남측 방문단,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
- 10.15 현대아산, 북한 금강산여관 30년 임대계약 체결
- 10.18 한·중 정상회담(서울)
- 10.20 아셈(ASEM) 정상회의,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(서울)
- 10.23~25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
-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차례 회담, 미사일 문제 등 협의
- 11. 2 NS21, 영화 '공동경비구역 JSA' 필름 북측에 전달
- 11.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, 북한 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손수레 1만대 북측에 전달
- 11. 8~11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(평양)
-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가서명
- 11.11~19 영화인 11명 방북
- 11.16 북-유엔사 장군급회담(판문점)
- 비무장지대(DMZ) 관리권 한국에 이양 합의
- 11.17~22 조총련동포(119명), 제2차 남측 고향방문

- 11.21 현대-북한, 서울-평양 민간 직통전화 개설
- 11.28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(판문점)
- 경의선·도로연결공사 협의
- 11.30~12.2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(서울, 평양)
- 12. 5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(판문점)
- 12. 7 서울 가정법원, 북한 주민에 대해 남한 호직등재 승인
- 12. 8 김대중 대통령, 노벨평화상 수상
- 12.11~14 민주노총,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(금강산)
- 12.12~16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(평양)
- 12.21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(판문점)
- 12.22 한국전력 공사, 현대건설 등과 북 경수로 주설비공사 계약
체결 발표
- 12.27~30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(평양)

- 1.15~20 김정일 국방위원장, 중국 방문
- 상해 등 경제특구 시찰
- 1.23~27 영국 외무성대표단(단장:마스덴 아태총국장), 방북
- 1.27~2.13 북 노동당대표단(단장:지재룡 부부장), 영국·프랑스·벨기에 방문
- 1.29~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(금강산)
- 남측 대표: 이병웅(수석대표), 고경빈, 최기성
- 북측 대표: 김경락(단장), 리금철, 리호림
- 1.31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판문점)
- 2. 1 우리측 창극단 「춘향전」 평양 공연
- 2. 3 남북, 「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합의서」 및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」 서명·교환
- 2. 6~20 EU 경제대표단, 방북
- 2. 8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판문점)
- 경의선 철도·도로 연결 공사에 따른 군사적 보장합의서 타결
- 2. 8~10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(평양)
- 2.18~3. 2 북 무역성대표단(단장:김동명 부상), 호주·브루나이 방문
- 2.21~24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(평양)
- 2.23 제2차 이산가족 생사·주소 확인 작업 결과 통보
- 2.24~3. 2 북 경제대표단(단장:전승훈 금속기계공업상), 이탈리아 방문

- 2.26~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상호 교환방문(서울, 평양)
- 2.27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, 한-러 정상회담 개최
- 2.27~3. 3 북 경제대표단(단장:한성렬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), 미국 방문
- 2.27~3. 6 고(故) 한덕수 조총련 의장 북측 조문단, 일본 방문
- 3. 2~3 스웨덴 「한스 그렌달」 외무차관, 방북
- 3. 3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, 대북 서한 전달
- 3. 6~11 김대중 대통령 방미, 부시 대통령과 한·미 정상회담 개최
- 3.10~13 영국 「존 커」 외무차관, 방북
- 3.10~14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, 문화·체육 교류 관련 협의
- 3.10~20 MBC 방북 취재
- 3.13 북측,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연기 요청
- 3.15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
- 남북 각 300명, 600건
- 3.17 북 외무성대표단(단장:최수현 부상), 핀란드·스웨덴·체코·폴란드·독일·프랑스 방문
- 3.18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, 평양에 남북공동대학 설립 합의 발표
- 3.20 경수로건설 현장에 우즈베키스탄 인력(207명) 투입
- 3.20~24 중국 당대표단(曾慶紅 당 조직부장), 방북
- 3.24 고(故)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측 조문단, 서울 방문
- 3.28 조총련계 북한국적 축구선수 양규사, 현대프로축구단 입단

- 3.28 북측,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불참 통보
- 3.30 광주시, 평양·남포지역에 김치공장 설립 합의 발표
- 4. 5 북,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개최(만수대의사당)
 - 「가공무역법」, 「감문법」, 「저작권법」 승인
 - 홍성남 총리 「2000년 사업징형과 2001년 과업」 보고
- 4. 6 조총련 동포(80명), 제3차 남측 고향방문
- 4.11 가수 김연자 함흥 공연
- 4.13 남북, 제3차 적십자회담시 합의한 서신 300통 전달 결과 구두 통보
- 4.19 북적, 비료 20만톤 지원 요청(대남 전화통지문)
- 4.26 정부, 대북 비료지원(20만톤) 발표
- 5. 1 민주노총·한국노총 - 북 직총, 노동자대회 개최(금강산)
- 5. 3 페르손 EU 의장 방북,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
 -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유예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심 표명
- 5. 4 페르손 EU 의장 방한, 韓-EU 정상회담 개최
- 5. 9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(副)장관 방한,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
- 5.14 북한-EU 외교관계 수립 계획 발표
- 5.19~7.10 KBS 방북 취재
- 5.23 북한-바레인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
- 5.25~26 한·미·일 대북정책 조정그룹(TCOG)회의
 -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 및 정책공조 방안 협의

- 5.28 북한, 6.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맞아 「우리 민족끼리 통일 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·단체 합동회의」 개최
- 6.4, 6.6 한복 패션디자이너 이영희, 평양에서 ‘한복전시회’ 개최
- 6. 6 부시 미대통령, 북한과 대화재개 선언 발표
- 6.13 미 국무부, 북-미 회담 결과 발표
- 6.14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「백두에서 한라까지」 개막(평양 인민대학습당)
- 6.15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, 판문점 통해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축하편지 교환
- 6.15~16 「민족통일대토론회」, 남북공동행사로 개최(금강산)
 - 남측: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소속 420명
 - 북측: 6.15~8.15민족통일촉진운동 북측준비위원회 소속 340명
- 6.20 한국관광공사,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
- 6.25 대한광업진흥공사, 남북합작 북한 광산 개발 발표
- 6.27 북한-터키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
- 6.28 북한-호주 대사관 개설 합의 발표
- 7.11 유성희 전 대한의협회장, 의협 대외의료협력단 일원으로 방북 중 평양에서 사망
- 7.13 금강산관광, 쾌속선 ‘설봉호’ 출항으로 재개
 - ‘금강호’ 동해항 귀항(6.30) 이후 일시적 중단상태였음.
- 7.18~19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「남북농민통일대회」 개최 및 공동보도문 발표(금강산)
- 7.20 한국관광공사, 금강산관광사업 실사단 방북

- 7.26 북한-유럽연합(EU)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 보도 발표
- 외교관계 설정일은 2001.5.14로 합의 등
- 7.26~8.18 김정일, 러시아 방문
- 7.29~31 통일염원 6.15 금강산렐리 개최
- 7.30 평양에 영국대사관 개설
- 8. 4 김정일과 푸틴, 「북-러 단독·확대 정상회담」 개최 및 8개
항의 「북-러 모스크바 선언」 발표
- 8. 8 「조선아·태평화위원회」, 금강산관광사업관련 대미 비난
성명 발표
- 8.10 서영훈 대한적십자 총재, 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(8.12)
맞아 성명문 북에 전달
- 8.15~21 「8·15 남북공동행사」에 남측 방문단 참가
- 7대 종단, 민화협, 통일연대 대표 등 394명 방북 승인
- 8.21 북한, 「8·15 민족통일대축전 북남, 해외 공동보도문」
발표
- 9. 3~5 장쩌민 중국주석, 북한 방문
- 9. 6 한·미·일 대북정책 조정그룹(TCOG)회의 개최(도쿄)
- 9.15~18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(서울)
- 홍순영 통일부 장관(남), 김령성 내각 참사(북)
- 9.21 제45차 IAEA총회, 북한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촉구 결의
- 10.3~5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(금강산)
- 10.9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 교환

- 10.12 북한 「조평통」 대변인,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및 태권도 시범단 파견 연기 담화 발표
- 10.16~18 서울·평양에서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었으나 무산
- 10.15 북한 중앙방송, 10.9~10 원산지역에서 해일과 폭우로 인해 수백명이 사망했다고 보도
- 10.19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,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부산 아시안게임 초청장 발송
- 10.31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5920호)
- 남북한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(1년6개월→3년) 및 교류절차 간소화
- 11. 3 북한 외무성대변인, 조선중앙통신 회견을 통해 '반테러 국제협약들'에 가입키로 결정 발표
- 11. 9~14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(금강산)
- 홍순영 통일부 장관(남), 김령성 내각 참사(북)
- 11.19 대한적십자사, 11.18 동해상에서 표류중 예인된 북한 선박 및 선원 송환
- 11.27 합참본부, 북한군 비무장지대에서 아군초소 사격 발표
- 11.27 한·미·일 대북정책 조정그룹(TCOG)회의 개최
(샌프란시스코)
- 11.29 국방부 대변인, 북한군의 비무장지대내 총격사건에 대한 대북 성명 발표
- 11.27 발생한 총격사건을 정전협정 위반 사안으로 확인, 비서장급 접촉 제의하였으나 북측 무반응
- 11.30 (사)남북협력 제주도민 운동본부, 감귤 및 당근 대북지원 계획 발표

- 12.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(KEDO) - 북한, 「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」 서명
- 12.16~31 북한의 경수로사업 관계자 19명, 원자력발전소 등 시찰 목적 남한 방문
- 12.17 북한 「조평통」대변인,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지속 비난 담화 발표
- 12.20 통일부 대변인, 「조평통」 담화 관련 '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촉구' 논평 발표

2002년

- 1.1 김대중 대통령,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강화 및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추진 강조
- 1.11 합참, 표류중인 북한 주민 구조 선박 입항 발표
 - 러시아 상선이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하여 1.12 진해항 입항(1.15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)
- 1.14 대통령 연두기자회견
 - 금년도 국정추진방향 4대과제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 설정
- 1.19 유엔 인도조정국(OCHA), 긴급구호보고서 발표
 -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촉구
- 1.23 정부, 「금강산 관광 지원방향」 발표
 - 이산가족·학생 등에 관광보조,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 상환조건 완화,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
- 1.25 한·미·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(TCOG)회의 개최(서울)
- 1.29 부시 미대통령, 2002년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'악의 축'으로 지목
- 2.19~21 부시 미 대통령 방한, 한-미 정상회담 개최,경의선 도라산역 방문 (2.20)
 - 미국은 북한 침공 의사가 없으며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지지 발표
- 2.27 「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」 무산
 - 북측대표단, 남측의 통일연대 불참을 이유로 행사 불가 통보
- 3.14 탈북자 25명, 주중 스페인대사관 진입 망명 요구

- 3.21 제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,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 방안 확정·발표
 - 이산가족, 학생, 교사, 통일교육강사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에 대해 경비중 60%~70% 지원
- 3.22 한·일 정상회담 개최
 - 한반도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한 의견 일치
- 3.25 남과 북, 임동원 대통령 특사 4월초 방북 동시 발표
- 3.28~4.1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, 남북 동시 방문
 - 북한(3.28~30), 남한(3.30~4.1) 방문
- 4.3~4.6 임동원 대통령 통일특보,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, 김정일 위원장 면담
 - 「남북공동보도문」(6개항) 서울과 평양 동시 발표
- 4.6 (주)평화자동차(사장 박상권)가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'평화자동차 종합공장' 준공식 개최
- 4.9 한·미·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(TCOG)회의 개최(도쿄)
 - 대통령 특사 방북이후의 대북정책 관련 의견 교환
- 4.11 민통선내 경의선 도라산역 개통식(1일 2회 운행)
- 4.12 각계 단체 대표들 방북, 「남북 단체 공동성명」 발표(금강산)
 - 「남북공동보도문」(4.5) 적극 지지 등 5개항
- 4.19 한직 서영훈 총재, 북직 장재언 위원장에게 비료 20만톤 지원 계획 통보
 - 4.25~6.2 25항차 예정
- 4.28~5.3 제4차 이산가족 상봉(금강산)
 - 4.28~4.30 남측 이산가족 99명, 북측 가족 186명 상봉
 - 5.1~5.3 남측 가족 466명, 북측 이산가족 100명 상봉
- 5.3 정부, 금강산댐 안전대책 발표
 - 홍수방지 대책, 평화의 댐 보강 등

- 5.6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」북측대표단,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시 발언을 이유로 회의 무산 성명 발표
- 5.6 통일부 대변인, 북측에 제2차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」의 개최를 비롯한 특사 방북 합의사항들의 조속한 이행 촉구
- 5.7 북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, 금강산댐 붕괴설 관련 규탄 담화 발표
- 5.10~15 제주도민 255명, 방북
 - 북 민족화해협의회(회장 김영대)가 감귤·당근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초청장 발송(4.25)
- 5.11~14 박근혜 의원, 「유럽-코리아 재단」 이사 자격으로 방북, 김정일 위원장 면담(판문점 통해 귀환)
- 5.15 전국 농민회 총연맹, '대북 쌀300만석 조기지원 촉구 통일쌀 출항식' 개최
- 5.16~17 북 아세안안보포럼에 대표단(박명구 전 인도대사) 파견
- 5.19~24 북 경수로·항공 관계자 10명 남한 방문
 - 양양공항·김해공항·울진 원자력발전소 시찰
- 5.21 미국, 북한을 포함한 7개 테러지원국 재지정
- 5.24 남북합작 농기계수리소 평양에서 준공
- 6.10 북·미, 미군유해 공동발굴 일정 합의
- 6.11 북한이탈주민 9명, 북경 주재 한국영사관 진입
- 6.11~15 남측의 초음파진단기 기술자 방북
- 6.12 남북한 최초의 합작대학 「평양과학기술대학」 착공
 - 2003년 9월 완공 예정

- 6.14 서방 선진 8개국(G8) 외무장관들 한반도문제 관련 성명서 채택
- 6.14 정부, 「6.15 남북공동선언」 2주년 즈음 남북대화재개 촉구 대북서한 전달(통일부장관 명의)
- 6.14~15 「6.15 남북공동선언」 발표 2돌 기념 통일대축전 개최 (금강산)
- 민화협·통일연대·7대종단 등 208명 참석
- 6.14~18 기독교인 평양에서 예배 개최(봉수교회·칠골교회)
-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등 337명
- 6.15~18 EU 대표단(스페인 라파엘 콘테 아주국장 등) 평양 방문
- 6.17~18 한·미·일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(TCOG) 회의 개최 (샌프란시스코)
- 6.18 한·미·일, 북에 IAEA 핵사찰 전면 협력 촉구
- 6.29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
- 6.29~8.29 한양대 교수 2명(오희국, 차재혁) 북한 김책공대에서 2개월간 강의
- 7.1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, 특사방북 철회 발표
- 7.12~14 대학생 통일탐구단 320명 금강산 방문
- 7.20 KEDO 관련 남북 직항로(양양 - 선덕) 운행(시험비행)
- 7.25 북 서해교전 관련 유감표명 및 당국간 회담 제의
- 7.28 북·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(평양)
- 7.31 북 백남순 외상, 아세안지역 안보포럼(ARF) 참석

- 8.2~4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(금강산)
 -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참가 등 공동보도문(5개항) 발표
- 8.5~6 KEDO 집행이사회 개최(서울)
- 8.6 UN 아동기금 북한과 「어린이 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」 실시 합의
- 8.12~14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(서울)
 - 남북 철도·도로 연결,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등 10개항 합의
- 8.14~17 8.15 민족통일행사 개최(서울)
 - 북측 대표단 116명 참가
- 8.17~19 북한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(금강산)
- 8.18~19 북·일 적십자회담 개최(평양)
- 8.19 북한이탈주민 3가족 21명 평북 선천에서 배로 입국
- 8.20~23 북·러 정상회담 개최(블라디보스토크)
- 8.25 IOC 위원(김운용 - 장웅)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합의(모나코)
- 8.25~26 북·일 외무국장급 협의(평양)
- 8.26 북한이탈주민 7명, 중국외교부 진입 시도
- 8.26~28 북한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(금강산)
 - 북측 선수·응원단 파견 등 14개항 합의
- 8.27~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(서울)
 -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공사 남북 동시 착공 등 8개항 합의

- 9.3 북한이탈주민 16명, 독일대사관 학교내 진입
- 9.5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백두산·한라산 동시 채화
 - 금강산에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에 전달(9.6)
 - 임진각 통일동산에서 합화(畵火)(9.7)
- 9.5~8 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(서울)
- 9.6~7 한·미·일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(TCOG) 회의 개최(서울)
- 9.6~8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(금강산)
 -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·운영 등 6개항 합의
- 9.10~1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(금강산)
- 9.11~14 MBC, 서울 - 평양(조선중앙TV)을 위성으로 연결, 이원 생방송 실시
- 9.12 유엔사 - 북, DMZ 공사 관련 관리권 이양 합의문 서명
- 9.12 북 「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」 채택(총 6장 101조)
 - 신의주 특구 지정 발표(9.21)
 -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(김용술)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 국제무역회사(양빈)사이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(9.23)
 - 초대장관에 양빈 회장 임명(9.24)
- 9.13~17 남북 철도·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(금강산)
 - 경의선·동해선 연결 구간, 접속지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제공, 착공식 등 7개항에 합의
- 9.13~18 제5차 이산가족 상봉(금강산)
 - 9.13~15 : 북측가족 100명, 남측가족 455명 상봉
 - 9.16~18 : 남측가족 99명, 북측가족 221명 상봉
- 9.14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판문점)

- 9.14~17 남측 태권도 시범단 평양 방문
- 9.16 수출입은행, 대북식량(쌀 40만t) 차관 계약
- 9.16~18 임남담 공동조사 실무접촉(금강산)
- 9.16~22 KBS,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개최(평양)
 -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단독공연(9.20)
 - 북측의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합동공연(9.21)
 - * 김태식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6명 공연 참관
- 9.17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(판문점)
 -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·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·발효
- 9.17 북·일 정상회담 개최(평양)
 - 북한의 피랍 일본인 문제 사과와 재발방지 등 4개항의 「북·일 평양선언」 채택
- 9.18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 착공식
- 9.19 남북 경의선·동해선 DMZ 지뢰 제거 동시 착수
- 9.23 남북 개천절 공동행사 개최 합의(평양 단군릉)
 - 남측 :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(위원장 한양원)
 - 북측 : 단군민족통일협의회(회장 류미영)
- 9.24 남북 군 당국간 직통전화 개통
 - 자석식 전화 1회선, 팩스 1회선을 오후 4시까지 운용
- 9.25~30 MBC 평양 특별공연
 - 이미자, 최진희 등 181명이 방북, 북측과 합동공연
- 9.26 미국 특사 방북 발표
 -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켈리(10.3~5)
- 9.29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, 응원단 등 총 668명 참가
 - 9.23 선수단 1진 159명 도착(김해공항)
 - 9.27 선수단 2진 153명 도착(김해공항)
 - 9.28 응원단, 기자 등 356명 도착(부산항)

